

2020년 05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9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5 (Vol.59)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6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주찬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0년 05 (Vol.59)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산림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현장의 규제 혁신 추진

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 국무회의 의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착수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부산시,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광주시,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착수
울산시, 정원문화·산업 진흥계획(‘20~’24) 수립
전남도, ‘섬 개발 특구 지정 방안’ 마련 첫발
제주도,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

10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행안부, 5개 지자체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선정
국토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 본격 활성화
중기부, 강원·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원격의료·자율주행 활성화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 선정
국토부,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75곳 선정
국토부,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완료
국토부, '20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개 지역 선정
대전시,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 선정
전남도, 서남해안 섬 지역 '명품 테마숲' 조성
세종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본격화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7

산업부·국토부,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토부,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국토부, 고지도·지리서 디지털 서비스 '국토정보 플랫폼' 구축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새 단장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5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공공택지기획과, 2020.05.12.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

②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 0.4대/세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세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0대/세대, 기타지역 0.25대/세대

** 행복주택은 철도역·역사 반경 500m 이내인 경우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적용 중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산림청, 2020.05.21.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통과되었다. 도시숲법의 국회 통과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생활권 숲의 체계적인 확충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서 단편적인 현행 법령 체계를 보완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도시숲법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민간임대정책과, 2020.05.26.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②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③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④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⑤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등이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현장의 규제 혁신 추진

지방규제혁신과, 2020.05.26.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개선 사례를 발표하였다.

1분기에는 신산업·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64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7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표 개선사례]

신산업 지원·전략 산업 확대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계약체결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기획재정부) 산불 진화용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국토교통부)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촌 지원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의 처마·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국토교통부) 한우 축사의 퇴비사 시설 기준 완화(환경부)
도시재생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노후 어린이집의 증·개축 허용(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문화(국토교통부)

국토부,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20~'25) 국무회의 의결

시설안전과, 2020.05.12.

국토교통부는 5월12일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완료

도시 정책

안전

*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제1차 계획은 법의 시행에 맞추어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법 시행('20)을 포함하여 6년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목표

- ◆ 새로운 기반시설관리 거버넌스 정립
- ◆ 전체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추진 전략

【관리체계】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관리대상·방식】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합리화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산업 육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

【투자·재원】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 다양한 안전투자 재원조달 방안 마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착수

계획총괄과, 2020.05.19.

진행

국토
정책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 19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으로, 현재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라는 사업 비전을 되짚어 보고, 미래수요 창출을 견인할 새만금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또한, 새만금의 6대 용지 구분체계(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도 전면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연결도로·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전략 등 재원조달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주택정책과, 2020.05.20.

완료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①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 하고, ②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③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④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소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부산시,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걷기좋은부산추진단, 2020.05.15.

진행

도시
정책

부산시는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기관과 모두 함께 걷고 싶은 부산 보행길 조성을 위한 ‘부산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람중심, 장소형성, 보행문명창조의 3대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비전 제시, 보행의 질 향상을 위한 보행장소화 계획(2부문 49개과제), 보행경영 활성화를 위한 보행활성화 계획(4부문 35개과제), 보행권리 확장을 위한 보행문명화 계획(3부문 27개 과제) 실현을 위한 조성계획, 계획비전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36개 도심보행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각종 보행사업 추진 시 활용함으로써 부산 전역에 대한 보행축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착수

도시정비과, 2020.05.12.

진행

도시
정책

광주광역시시는 10년 후 광주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

*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

광주시는 앞으로 501.18km² 중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km²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하여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정원문화·산업 진흥계획('20~'24) 수립

생태정원과, 2020.05.19.

완료

도시
정책

환경

울산시는 정원 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2020년~2024년(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이번 진흥 계획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원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시민의 삶 속 정원의 생활화 실현, 정원문화 산업 기반구축과 정원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원 인프라 확충(7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3개), 정원산업 기반 구축(4개) 등 3대 전략에 14개 과제 과제로 짜였다. 사업비는 총 480억 원이 투입된다.

전남도, '섬 개발 특구 지정 방안' 마련 첫발

섬해양정책과, 2020.05.26.

진행

국토
정책

문화
관광

전라남도는 섬이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섬 특구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현재 섬 개발을 가로막은 주요 지역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섬 지역 대부분이 규제로 묶여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지에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도 섬지역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26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제시된 내용은 주로 그동안 섬 개발을 저해한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 현황 분석과 해소방안을 비롯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섬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개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발굴이 언급됐으며, 국내외 우수 섬 가꾸기 사례 소개 및 섬·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방향 등도 건의됐다.

제주도,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

산림휴양과, 2020.05.22.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정부가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최근 제주지역의 여건변화 등과 연계한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 녹지기본계획*」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한 기본계획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현황조사, 인문환경조사와 주민의식 조사 등을 수행하고 종합분석 실시한다. 공원·녹지의 확장 가능성 검토와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산업입지정책과, 2020.05.07.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추진 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 구미국가 산업단, 광주 첨단국가산업단, 대구 성서일반산업단, 인천 남동국가산업단, 전남 여수국가산업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경북도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업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업 단지 중심의 일자리 여건 개선
광주시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新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업단지로 전환
대구시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업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 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
인천시	점·연계산업·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 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 마련
전남도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업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

행안부, 5개 지자체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선정

생활공간정책과, 2020.05.11.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5개 지자체로 대전 서구, 경기 하남시, 충북 단양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 하고,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전거 정책 모델을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 본격 활성화

녹색건축과, 2020.05.13.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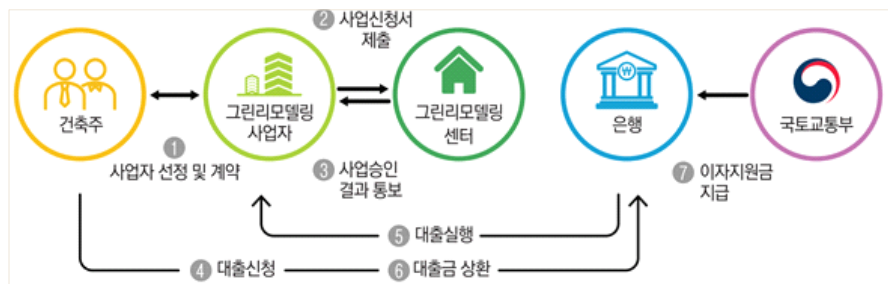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중기부, 강원·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원격의료·자율주행 활성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020.05.13.

진행

도시
정책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가 전문적인 특구사업자를 보강하고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본격 실증에 착수한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 2곳과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세종 자율주행규제특구는 국산 자율주행차량 운영 사업자가 추가 참여하고 자율주행 도로안전 인프라 강화 및 관제시스템 운영사를 새로 추가하여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기술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 선정

도심재생과, 2020.05.19.

완료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거버넌스 등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 서울(금천구, 양천구), 부산(수영구), 인천(강화군), 광주(광산구, 동구, 북구), 울산(울주군), 경기(안양), 충북(청주), 전북(고창, 부안), 전남(광양), 경북(구미), 경남(김해, 남해)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75곳 선정

도시재생역량과, 2020.05.21.



국토교통부는 두 달에 걸쳐 ‘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5월 21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하였다.

*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

선정된 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간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통해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 선정 현황]

서울	3	대구	1	세종	1	강원	10	전남	7	경북	6
부산	3	광주	3	울산	1	충북	3	전북	6	제주	1
인천	3	대전	1	경기	11	충남	6	경남	9	총계	75

국토부,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완료

도시정책과, 2020.05.25.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부천대장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 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하여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광명학온은 신안산선(24년 예정) 신설 역사가 위치하여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4호선 신길 온천역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신도시별 면적·호수]

구분	부천대장	광명학온	안산신길2
면적	3,430천㎡	683천㎡	757천㎡
호수	20천호	4.6천호	5.6천호

국토부, '20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개 지역 선정

도시경제과, 2020.05.28.

원료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0년 「스마트 챌린지」 공모결과, 총 80건을 접수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해 18건의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시티는 대표솔루션 실증 및 본사업계획 수립(국비 15억)을, 타운은 본사업계획 수립(국비 3억)을, 솔루션은 제안 솔루션 조성(국비 3억)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6월 중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챌린지 '20년 공모사업 선정결과(가나다 순)]

시티챌린지						
강원강릉	지역관광·상권과 연계서비스 MaaS 통합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교통 환경 시스템		
경남김해	산단 물류창고 및 운송차량 공유 등		제주도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 연계서비스		
타운챌린지						
강원원주	대학·지역사회 잇는 교통·안전 서비스		전남광양	순환형 에코포인트 플랫폼		
경남창원	진해해양공원 스마트관광타운		충남서산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교통·환경 서비스		
솔루션챌린지						
강원	양구	돈사 약취 저감 솔루션		충청	서산	드론활용 도서지역 물품배송
세종	강동	바이러스, 미세먼지 차단 솔루션			청주	스마트 거리공연 지원 플랫폼
	양천	전기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호남	광산	공동주택 주차공유
고령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스마트 파크			순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사천	스쿨존 안전솔루션			완주	스마트 버스정류장

대전시,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 선정

정책기획관, 2020.05.13.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국토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개 지역으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했다.

대전역세권지구는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혁신도시 성공 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연축지구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대전시는 과학기술과 교통의 중심이라는 강점을 반영해 교통, 지식산업, 과학기술 등 대전시 혁신도시 발전전략에 부합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서남해안 섬 지역 ‘명품 테마숲’ 조성

산림보전과, 2020.05.13.



전라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연계,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부각한 난대숲 복원조성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 대표 명품 테마숲을 조성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 신규 국고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9년 까지 총 3천 7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서해안 영광을 시작으로 남해안 광양까지 16개 시군 63개소의 섬 지역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테마숲을 복원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다도해권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필 꽃섬 35개소를 조성한다. 남도문화권은 역사문화인문 콘텐츠를 가미한 섬숲 14개소를 복원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해양레저권은 섬과 섬을 연계한 해양레포츠 섬숲 14개소를 조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세종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본격화

경제정책과, 2020.05.25.

진행

도시
정책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① 도심공원 자율주행 ②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③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

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

산업부·국토부,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에너지효율과, 2020.05.11.

진행

건축
정책

환경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 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 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성과 제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 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건축정책과, 2020.05.18.



건축
정책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5월 19일에 출범하여 2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하여 건축허가제도 추가 개선, 발주방식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예정이다.

국토부, 고지도·지리서 디지털 서비스 '국토정보 플랫폼' 구축

국토조사과, 2020.05.25.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지도정보를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옛 지도에 나타난 호구 총수(가구수), 도로, 고산성(옛 산성), 방리(하급 행정구역), 봉수(봉화를 올리는 설비), 역참(조선시대 교통 통신기관), 읍치(오늘날 시청, 군청) 등 보다 자세한 지리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역사와 지리 정보를 결합한 역사지리정보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새 단장

건축정책과, 2020.05.31.

진행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노후화 및 지자체별 분산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건축물 빅데이터 제공 등을 위해 미래 데이터산업 지원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다.

‘19년~’21년까지 3년간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22년 데이터 이관 등을 거쳐 전국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며, 올해는 대민포털, 사업자 민원 업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